

북한개발소식

2023 AUG

08

통권 214호

이달의 주제

중국의 선교환경 동향과 북한선교

탈북민 수기

이끄심 - 8화 - 2차 탈북

북한뉴스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99명...

“향후 입국 추이 지켜보아야”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3 AUG



이달의 주제 :

중국의 선교환경 동향과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중국의 선교환경 동향과 북한선교
- 칼럼_1 **11** 함태경_ 선교의 적신호는 이미 켜졌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 칼럼_2 **17** 김종구_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중국교회
- 칼럼_3 **24** 김정아_ 통일مام연합회 대표
- 선교일언 **32** 최재덕_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의 선교전략: 외교적 관점에서
- 탈북민 수기 **37** 이끄심_ 8화 - 2차 탈북
- 북한뉴스 **42**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99명... “향후 입국 추이 지켜봐야”
- 북한 기도 제목 **4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특별히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중국의 선교환경 동향과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최근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처벌과 확대된 적용 범위를 담고 있으며, 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문구들이 있어 실제 적용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교민들과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면 봉쇄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중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시행했던 22년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그렇지만 국내의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상황에 따라 작년 12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전환 석 달 만인 올 2월 23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기본적으로 종식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 그렇지만 중국의 상황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사리 풀리지 않는 모양새이다.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종료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재개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통제의 수준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관찰되어왔다. 특히 17년도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진 한인 선교사 추방 사태와 18년 중국의 신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따른 교회에 대한 단속과 통제 강화는 선교에 큰 어려움을 야기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완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른 상황 개선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의 통제 강화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외 선교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 상황의 악화는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큰 우려이며 기도의 제목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의 선교환경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및 기도제목에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중국, 위드코로나 석달 만에 “코로나 기본적으로 종식”, 한겨레 (2023.02.2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1072.html>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트렌드

1)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최근 주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하라고 공지했다.²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가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명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로 범주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국가안보 및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수준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높은 부분이다.³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서 기존에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간첩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15일 이하의 행정구류만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간첩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도 가능한데 추방될 경우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교민들이나 기업, 언론 등은 혹시나 자신들의 활동이 이 법에 저촉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더 강한 통제와 처벌을 담은 법을 만들고 시행할까? 일각에서는 중국은 이러한 법이 없이도 이미 충분히 광범위한 간첩 단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말하는 방첩의 목적보다는 그에 따른 효과에 주목한다.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함으로써 시진핑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고, 법에 근거를 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안과 군대 등 다기관 협력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주권의 한 측면으로 강조해온 시진핑 정권이 해당 법을 통해 중국 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외국 기업과 중국 기관 간의 메일이나 연락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연락에 있어서도 반간첩법에 저촉, 처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⁴

북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반간첩법 적용이 우려된다. 해당 법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 뿐 아니라 “제 3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이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벌써부터 북중 국경 관광 시에 북한에 대한 촬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⁵

2) 전방위 비디오 감시체계와 AI

2018년 장시성 난창시에서 열린 홍콩가수 장췌유의 콘서트장에서 안면인식기술로 경제범죄 용의자가 적발, 체포되었다. 6만 명이 넘는 군중이 운집한 콘서트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이 사건은 중국의 안면인식기술 발전 수준을 짐작케 한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안면 인식 기술과 연결시켜 범죄 예방과 사회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이 가장 빠른 곳이다. 중국매체 남방도시보가 2020년 중국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일상생활에서 안면인식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안면인식 서비스는 금융거래(67.17%)였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접촉 개인인증 수단으로 안면인식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때 공항에서처럼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쳤지만, 이제는 엑스레이 검색대 대신 안면인식 스캐너가 들어섰다. 호텔 체크인이나 대중교통 티켓 구매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는 기숙사와 도서관 출입 및 출석체크에도 ‘얼굴 학생증’을 쓴다.⁶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 발달에는 다수의 CCTV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영상자료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힘이 컸다. 중국은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다. 영국 정보기술 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티크(Comparitech)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감시카메라(CCTV)가 가장 많은 도시 20곳 중 18곳이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⁸ 이러한 다수의 CCTV에서 수집된 자료는 정부 공안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범죄자를 찾는 데 이용된다. 2005년부터 중국이 구축해온 범죄 추적 시스템 ‘텐왕’(天網, Skynet)이다. 수억대의 CCTV 화면이 이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등록된 범죄용의자 정보와 대조하고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중국은 샤프아이스 (Sharp eye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산둥성 타이산산 입구에서 모자를 쓴 관광객이 안면인식 체계를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해 모자를 쓴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2 주중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801>

3 중국, ‘반간첩법’ 오늘 시행…‘피해 우려’, MBC뉴스 (2023.07.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9066_36170.html>

4 [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중앙일보 (2023.07.06.),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175251#home>>

5 백두산서 北 향해 사진 찍어도 위험...中 반간첩법의 치명적 조항, 주간조선 (2023.07.0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7/09/Gj5T5PTCHNETZPRV33QNEZ4XMQ/>

6 유마디, “중국 안면인식 기술 이끄는 ‘4마리 용’”, 동아비즈니스리뷰 315호 (2021년 2월 Issue 2), <https://db.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9944/ac/magazine>

7 안면인식기술의 천국 中… ‘하이테크 전체주의’ 논란, 동아일보 (2021.01.21.),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21/105019980/1>>

8 ‘감시 사회’...CCTV 가장 많은 도시 20곳 중 18곳이 중국에, 한국경제 (2020.07.2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7271798i>>

2015년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나 법집행기관의 카메라 영상 감시 뿐 아니라 감시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정의 TV나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감시체계이다.⁹ 이를 통해 인구밀도가 낮은 도서지역에서도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텐양의 시스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 활동에 대한 강화된 제약

2018년 2월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통해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중국은, 이후에도 기독교 활동 규제 강화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등록 교회(가정교회)에 대해 폐쇄와 철거를 진행하고, 등록교회(삼자교회) 앞에는 안면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교회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나 단체와 어떤 교류나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이나 신앙서적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북한과 인접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폐쇄를 유도해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종교활동 통제가 강화되었다. 22년 3월 1일부터 중국은 ‘인터넷종교서비스관리방법’¹⁰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예배스트리밍이나 설교, 출판 등 인터넷 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헌금은 금지되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종교 활동도 금지된다.¹¹

중국의 상황변화가 북한선교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통제와 탈북자 구출

중국의 디지털 통제 강화와 반간첩법, 그리고 종교 활동 통제 관련 법률과 규율의 제정은 북한 선교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타격이 큰 사역 분야 중 하나는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구출 활동이다. 안면인식 기술은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을 특정 증거가 아닌 생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등록이 되어 있을 리가 없는 탈북자들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

전에도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승객들의 신분증을 태블릿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신원 확인을 강화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개인에 대한 동선 확인이 방역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지면서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서의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는 중국의 공항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보안 검색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신분증이 없거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던 탈북자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중국 내 이동은 원천 봉쇄되었다.

도심지와 도서지역을 가리지 않는 중국公安 당국의 CCTV 기반 감시체계의 구축은 탈북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탈북자 구출과 연관된 사역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CCTV를 통한 추적으로 의심되는 탈북자 적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¹² 비록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적발됐거나 체포된 탈북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아직 중국의 감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람이 많아 이러한 추적이 반드시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CCTV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범죄 추적 시스템이 탈북자들의 운신의 폭을 대폭 위축시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반간첩법과 종교통제법령의 부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은 탈북자 구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탈북자를 돕는 사람이나 탈북자 구출에 관여한 브로커도 간첩죄로 역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현지 브로커 등이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써서 풀려나거나 벌금형 혹은 1~2년의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¹³ 그러나 간첩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의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¹⁴ 대중교통 이용 불가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탈북자 구출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대중교통 이용 불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추적과 체포, 그리고 강화된 처벌에 대한 리스크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치더라도 구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물리적으로 구출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¹⁵

종교 활동에 대한 강화된 통제 역시 북한선교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북한 선교

9 Dahila Peterson (2021), “How China harnesses data fusion to make sense of surveillance data”, Brookings 홈페이지 (2021. 09. 23.), <<https://brookings.edu/articles/how-china-harnesses-data-fusion-to-make-sense-of-surveillance-data/>>

10 인터넷 사회주의 관리장성을 구축하는 중국 -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웹진 중국을 주제로 2022년 2월호 (2022.02.03.), <http://www.chinatogod.com/main/z3s_c_v.php?no=5004&ctg_no=234&-div=2>

11 ‘디지털 박해’가 시작됐다...중국, 온라인교회 금지령, 국민일보 (2022.03.04.),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834882>>

12 중국 AI 공포에 탈북민 땀다...적발 잇따라, 자유아시아방송 (2023.06.14.),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defectorsinchina-06142023073923.html>

13 “중국 반간첩법은 ‘악법 중 악법’...탈북민 구출 활동 봉쇄될 수도”, VOA (2023.07.06.), <<https://www.voakorea.com/a/7168714.html>>

14 중국의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간첩조직에 참가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하고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적에게 공격 목표를 지시하여 국가 안전을 해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법률신문 (2023.07.1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9263>>

15 VOA (2023.07.06.)

는 한인 선교사 뿐 아니라 현지에서 동역하는 중국인 사역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당국의 교회를 향한 통제가 워낙 거세다보니 상대적으로 현지 교회의 선교 참여의 여건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은 현지 교회들의 위험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에 의하면 실제 간첩활동과 전혀 무관 하더라도 북한이나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선교사 추방 사태 이후 한인 선교사의 파송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파송이 되더라도 눈에 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역에는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 커진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3) 중국 내 북한 여성에 대한 정책 변화와 강제복송의 위협

한편, 중국 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여성들에 대해서 체포나 복송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 일부 관찰된다. 통일만연합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중국 일부 지역의 공안들은 탈북 여성들에게 5천에서 7천 위안 사이의 돈을 내고 임시거주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들에게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면 잡아가지 않겠다”, “북한이나 한국에 연락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탈북 여성 복송이 이들을 아내로 둔 도서지역 중국인 남편과 가정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어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보인다.¹⁶ 이러한 관리적 조치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사회통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시거주증이 오히려 강제 복송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여전하다. 해당 증명 발급이 맥락에 따라서는 공안당국이 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판단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체포와 복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도 체포되어 복송 위기에 처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 관련 활동가는 중국 공안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막아서 어차피 탈북자들을 복송을 시킬 수 없으니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기는 했지만, 후에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이들을 강제복송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의 국경봉쇄로 강제복송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국경이 열리게 되면 다시금 복송이 재개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근 수년간 중국이 접경지역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확대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 2천여 명의 북한

사람들이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대로 복송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¹⁷ 앞서 살펴본 탈북 여성들의 상황도 중국인 남편과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라면 관찰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변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강화된 통제 속에 오히려 전보다 더욱 극심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의 정책 배경과 향후 전망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현 공산 정권의 체제 유지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는 중국 공산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한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문제를 통제 기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러한 통제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더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공산당의 통제 기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¹⁸

개중에는 공산당 내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세종연구소 김기수 연구위원은 공산당 내 파벌 다툼에 주목한다. 김기수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사회통제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며, 특히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 이유에 대해서는 현 기득권 유지의 방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즉 덩샤오핑이 당내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권력 분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반대파(상하이방이나 공청단 등)의 보복을 방지하고 기득권(태자당, 특히 친 시진핑 파벌인 시자젠)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¹⁹ 즉 당 내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사회통제 강화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특별히 시진핑 3연임으로 1인 지배 체제 강화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통제 강화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모준영은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 강화 수단으로 외부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방화장성’(Great Firewall), 앞서 언급된 CCTV와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전방위 비디오 감시 체계’, 그리

17 北인권단체 "中 탈북자 구금시설 위성사진 확인...시설 확장", YTN (2023.06.14.), <https://www.ytn.co.kr/_ln/0104_202306140338400019>

18 평등을 외치면서, '계급'이 생겨버린 중국의 딜레마 [조영남의 중국통 최종화], <<https://www.youtube.com/watch?v=3fSrln1TFyE>>

19 김기수 (2021), “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2021-19, 1-17.

20 상무위원 6인이 '시자젠'...상하이 봉쇄 책임론에도 리창 총리 내정, 서울신문 (2022.10.23.), <<https://m.sedaily.com/NewsView/26CGOOM5PQ#cb>>

16 中,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 발급, 월간조선 홈페이지 (2022년 11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211100027>>



〈시진핑 3기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이 모조리 시 주석의 측근 세력인 '시자권'으로만 채워졌다.²⁰⁾〉

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개인의 사회신용을 점수화 하고 저신용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신용체계'를 꼽았다.²¹ 실제로 신장웨이우 월 자치구에서는 2017년 이후 해당 지역 인구보다도 많은 CCTV 설치, DNA자료 수집 및 동공 스캔 등 생체 정보 수집, 휴

대폰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자동으로 정부 서버에 전송하는 스파이웨어 설치 등을 통해 위구르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교육할 위구르인들을 걸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² 신장웨이우월의 사례는 중국이 향후 디지털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은 기존 집단 지도 체제의 규칙을 깨고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지었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친시진핑 세력으로 채우면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 해졌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어온 사회통제 정책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향후 중국에서의 북한 선교에 대한 고민

중국의 통제 정책 기조와 급격한 기술 발전을 미루어볼 때, 중국 당국에서 금지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선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

먼저 중국내 탈북자 구출 사역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출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고, 적발되었을 시의 처벌 수위나 탈북자의 강제복송의 위험은 높아졌고, 탈출 비용도 급격히 상승한 만큼 정말로 탈출이 필요한 처지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북자 구출이 인권 차원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일부 브로커들이 돈벌이를 위해 긴급한 탈출의 필요가 없는 탈북자들도 부추겨 한국행을 조장하거나, 브로커들 간의 경쟁 속에서 부패한 공안들이 뒷배 역할을 하며 개입하는 등 여러 부작용²³⁾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사역 행태가 좀 더 건강하게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구출 사역의 급격한 위축은 탈북 경로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는 만큼, 구출 시도는 줄어들더라도 위급한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경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그 외에 중국 내 북한 여성들 뿐 아니라 그 자녀와 한족 가족들까지 사역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탈북자 선교가 중국선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²⁴

탈북자 유입 감소와 해외북한선교현장의 보안 위기 증가에 대응하여 각 교회가 북한선교 사역을 국내적으로는 유동화하고, 해외에서는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실대 하충엽 교수는 중국의 안면인식 고도화로 인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급감, 조종 접경에 운영했던 선교거점의 철수, 교회의 중국 방문 부담 증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교회의 국내 탈북민 사역은 유동적 형태로 전환하고, 접경 선교 거점운영은 사람을 교체하거나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하고, 기존 북한선교부서 외에 접경 지역 현장사역자와 협력할 대외비 북한선교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해당 부서는 구두(口頭)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²⁵ 국내에서는 신규 유입 탈북민 감소를 염두에 둔 사역을 개발하고, 해외 사역에서는 보안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의 북한선교현장과 우리의 기도-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를 기대하며

중국의 선교환경 악화는 앞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해야만 북한 선교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조종 접경에서 북한 사진을 찍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역이나 활동은 이제 더욱 어렵고 위험해졌다. 그렇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사역 가능성이 열려있다.

선교사가 은밀하면서도 꾸준히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과 결단이 필수적이다. 일선 교회 입장에서 북한 선교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싶어도 사역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사역을 참관하거나 참여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선교사 파송이나 사역지원을 결정하는데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교회와 선교사 간의 신뢰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비록 사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거나 제시된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사역을 하리라고 교

21 모준영 (2021), "시진핑 정부와 '디지털 권위주의'", 아세아연구 64(1), 334-339.

22 우평균 (2019), "디지털 권위주의와 통제 메카니즘의 확산: 중국, 러시아 모델과 한국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 43(3), 204-206.

23 중국, 한 달 새 탈북민 20여 명 체포...구출 비용 1인당 1만달러 넘게 폭등, VOA (2023.02.24.), <<https://www.voakorea.com/a/6976835.html>>

24 中 안면인식 기술·반감첩법에 얼어붙은 탈북민 사역, 국민일보 더 미션 (2023.07.12.),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84>>

25 하충엽 (2022), "북한선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모색", 송실평화통일논평 (2022.11.15.), <https://ssipu.ssu.ac.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60>

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과 진실성을 갖춘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도 신뢰 속에 파송한 선교사에 대해서는 비록 사진자료나 사역지 방문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선교 현장의 안전과 안정적인 사역 진행을 위한 기도와 함께, 더욱 어려워진 선교 환경이 선교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 불필요하게 야기되었던 문제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를 제안해본다. 그 동안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선교 사역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언론들이 특종 거리를 얻기 위해 벌이는 활동 속에서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이용당하기도 했고, 또 사역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더 엄해진 처벌과 열악해진 환경은 선교 활동의 위축을 불러오긴 하겠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북한 사역에 관여했던 기관이나 사람들은 떨어뜨리면서 순수한 사역자들만 남기는 효과를 일으켜 사역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다가온다. 큰 위험을 감수하며 조용하게 선교에 나서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외 북한선교현장이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갱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북한 선교의 끈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

칼럼 1

선교의 적신호는 이미 켜졌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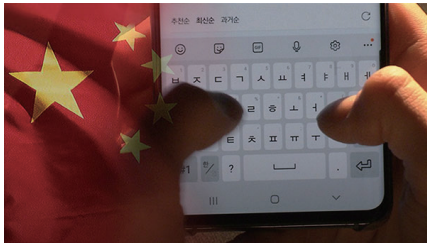
함태경 (CGN 경영본부장, 전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통제는 매우 정교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을 찬찬히 뜯어보면 중국의 속내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유출 시에 처벌받는 정보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빈번히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의도와 관계 없이 간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간첩 행위로 만들 수도 있다. 외국 언론의 경우 북한이나 탈북민 취재를 할 때 중국 접경지대 등지를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기명,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은 물론 취재원 보호조차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출장·여행 중인 사람에게도 이 법은 적용된다. 중국 안전기관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도 할 수 있다. 간첩 행위로 의심된다면 영장 없는 소지품 수사도 가능하다. 반간첩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계심은 만만치 않다. “중국에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심하라.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만 해도 간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계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번 법 규정의 모호성을 역으로 이용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활용해 학습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중



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종교사무조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외에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머지않아 공표할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宗教活动场所管理办法)’이 곧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초안에 따르면 종교 활동장소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철저히 심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과 독립적, 자주적, 자영(自營)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화합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허가 조건은 정부가 인정하고 발급한 “종교교직원증명서(宗教教职人员证书)”를 제공해야만 한다. 종교 활동장소는 교회, 교파(종파), 개인의 이름 등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불법 종교 조직에 가담해 불법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종교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또 국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국외 종교단체 또는 기관의 교직 위임을 임의로 수락한 자, 종교의 독립과 자주, 자영의 원칙을 위배한 자도 경질의 범위에 포함된다. ‘새장 속 종교 활동 허가’ 의지가 더욱 분명히 담겨 있다. 정부는 종교 생활 전 분야에 대해 제한할 수 있고 무엇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회가 각자의 교리적 특성, 전통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종교의 세력화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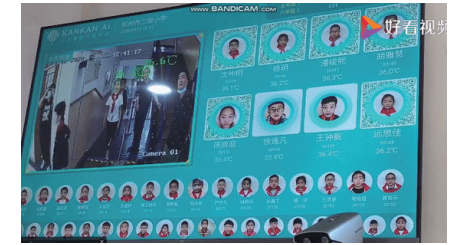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의 일상을 실시간 감시할 뿐 아니라 통치 능력과 통제를 강화해나가는 대표적인 국가다. 사진, 얼굴 특징 등으로 인물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주의 인물은 추적·통제될 뿐 아니라 동적 분석과 위험 평가까지 한다. 방범카메라(CCTV)로 실시간 위치도 추적한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이전부터 중국은 외국인 동태 등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기자와 외교관 등이 거주지 외의 지역을 방문하면 외사담당 공간이 휴대전화로 연락해 방문 목적을 캐묻거나 숙박 호텔로 직접 찾아오고는 했다. 과거에는 호텔 체크인을 해야만 도착 사실이 공간에 통보됐다. 그러나 기차 등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예약과 동시에 동선이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이동통신 가입 때 얼굴 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아파트 단지 출입 등록,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신분증 외에도 얼굴 정보를 요구받았다. 중국 거리 도처에 있는 CCTV와 인

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중국 정부는 원하는 대상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화상 감시와 통제 범위를 넓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감시·예측하고, 안면인식 기술로 통치 능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인 듯하다.

중국에서는 예고편 없는 정책은 없다. 통전부의 역할 강화도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2018년 3월 21일에 공개된 ‘당·국가기구 심화 개혁방안’에 따르면 당 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선전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이 당 통일전선공작부(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통전부)에 흡수돼 당의 종교관리 감독이 더욱 선명해졌다. 또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국무원 교무(侨务)판공실도 통전부에 통합됐다. 1942년 설립된 통전부는 비공산당 정파와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중국공산당의 핵심기구로서 공산당의 의도대로 상대를 유인·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선전부는 중국공산당의 사상이나 노선의 선전, 교육, 계몽을 담당한다. 중국 내 신문, 출판물,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를 감시하고 국무원 내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와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방송텔레비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당원, 비당원 모두를 감찰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를 위한 위기 단계별 대응 절차와 정책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관리 체계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선전부 사이버국, 중앙선전부 여론정보부, 인민망 여론감축실, 신화망 여론 감축분석센터, 국무원 신문판공실 사이버 연구센터, 성급 정부 여론감축센터, 국무원 부서 여론감축센터 등이 나선다. 위기 태동기에는 댓글 삭제 등을 통해 서간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기 발전기에는 여론분석가가 사건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고 여론 경보 수준을 판단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위기 고조기에는 여론 주도자를 파악해 포섭하고, 포섭 불가능한 여론 주도자를 구별해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한편 당정간부는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위기 쇠퇴기에는 정부에 대한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는 데 힘쓴다.

감독 기제로 인터넷 감시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경찰 약 5만 명, 사이버 평론원(인터넷 모니터링 요원) 25~30만 명, 사이버 여론 관리사, 민간 인터넷 기업에 있는 인터넷 검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공산당 당대회 등 민감한 시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고, 정부의 공식 관점과 다른 해석과 논리가 전파되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엄격하게 작동시킨다. 국제 행사 기간에 앞서 관련 감시, 통제 시스템을 작동한 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완



〈중국의 안면인식 등교시스템. 해당 시스템은 안면인식을 통해 학생의 이름, 체온, 마스크 착용 여부, 등하교 시간 등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한국일보)〉



〈중국 테니스 스타 평샤이(좌)와 장가오리 전 상무 부총리(우)〉

화한다. 한편 인터넷, 소셜미디어 상에서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상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한다. 문제의 목표 집단일 경우 정보 배포, 분석, 수집, 소비를 원천 차단한다. 예를 들어 검색 기능을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전송하고 이메일이 반송되도록 한다. 일반인의 경우 정보 접근과 배포에 비용이 증가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방화벽을 설치하고 검색 필터링과 봉쇄를 통해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차단한다. 정

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해 대중이 관련 정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백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결국 소멸된 것은 중국의 사이버 대처능력이 매우 정교하다는 사례라는 게 중국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검열과 세계적인 수준인 안면인식기술까지 동원해 모자, 마스크를 쓰고 백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원 파악을 끝내고, 이들 대학 청년의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정부기관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음을 인식시켜 더 이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중국의 테니스 스타 평샤이(彭帥)가 2021년 11월 웨이보에 장가오리(张高丽)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평샤이’, ‘장가오리’라는 단어가 웨이보에서 금지어가 됐고 20분 만에 관련 글이 사라졌다. 평샤이는 “부총리까지 오른 분이라 이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위챗도 관련 메시지 전송을 막았다.

어떻게 대응할까? ‘제자도’와 ‘협력’이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등 종교 문제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어찌 될 것인가? 국가주도형 해결방안이 속속 제시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한 예고편이 2018년의 ‘종교사무조례’, ‘기독교의 중국화(基督教中国化)’를 포함한 ‘종교의 중국화(宗教中国化)’ 실현, 중국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 제한과 제도 밖 가정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과 처벌,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핀셋 추방 등을 통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전술 구사, ‘인터넷종교정보 서비스관리방법’ 시행 등 온오프라인 조치였다. 시진핑 시대에서 종교 문제는 더 이상 관찰과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타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도 내 삼자교회의 경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하겠지만 제도 밖 가정교회의 경우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설령 삼자교회일지라도 중국식 현대화에 방해된다면 박멸과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본보기로 특정 삼자교회는 물론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향한 강도 높은 각종 조치들이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앞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시진핑 1인 시대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또는 2035년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면 어찌 할 것인가? 처방전은 어쩌면 매우 간단하다. 시진핑 3기 체제의 기반인 중국공산당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학생 등 선진분자(先进分子)의 각 분야 상위 6~7%에 해당하는 엘리트 연합체다. 총인구 14분의 19671만 2000명이 당원이다. 이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기(不忘初心牢记使命)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당원 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당원 2명의 추천서와 입당 지원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적극분자(积极分子)’로 분류돼 1년간 교육과 검증을 거친다. 1년 교육훈련을 통해 걸러지면 예비 당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1년 이상 학습, 훈련을 거친 뒤 또다시 검토 과정과 당원대표대회 표결, 상급기관 비준을 통과해야 정식 당원이 된다. 입당 신청자 중 7~15% 정도만 정식 당원이 된다. 당원들 가운데 간부가 되는 길은 더 험난하다. 수시 검증과정과 강도 높은 국내외 교육과 연수 등을 거쳐 실무능력과 정무감각을 갖춰야 한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병원은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이 없는 곳이 없다. 이데올로기 선전, 문화 분야는 물론 미시·거시 경제, 정보, 과학기술,公安, 대테러 등 국가 발전과 안전업무를 당이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구 관리와 대민 통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정치 전반의 안정과 수호 능력 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삶의 면에서 거룩한, 차별화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더욱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글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서 일상이 될 때 엄청난 역동성이 생겨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됨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됨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반기독교 정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은 각자의 헌신이 가능한 대로 한 데 모아지게 하고, 처한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개별 또는 연합적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서로 동료들의 애씀을 존중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주면서 자신들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한다. 각각의 선교 퍼즐이 제 위치에 맞춰질 때 선교사들에 의한 중국선교를 넘어 중국 기독교인들이 자민족 복음화를 넘어 열방을 나아가는 선교중국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중국교회와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온전한 교회와 기독교인, 제자가 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혹시 어려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중국 정부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예방, 감시, 통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지언정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교회가 존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시공간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교회는 과학기술과 뉴미디어에 보다 숙련된 이들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마음껏 상상력을 날개를 펼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변증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정서적 유대감까지 형성해 새로운 ‘온라인 EPIC(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 공동체’를 만들게 해준다. 대학 강의실은 물론 예배당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복음을 복음 되게 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압박, 탄압은 두려움과 조급증의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를 통해 외부세계와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해나가려고 한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삼자교회와 신학교가 안고 있는 숙제 또한 녹록치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준비된 이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된다. 해외 중국인교회와 한국교회, 중국을 포함한 중어권 기독교인들(선교사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선교사들)이 연합과 협력을 통해 중국선교와 선교중국의 퍼즐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논의하고 일정 부분 실천해나가면 머지않아 열매를 거두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난한 나날과 과정을 경험하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한 길을 걷다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맺은 열매들이 북한 선교의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엔 결코 작은 일이 없다. 달한 문은 없다. 모든 합이 곧 완성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칼럼 2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중국교회

김종구 선교사 (빌리온선교회 선교연구원장)

글을 시작하며

중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국제 관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적 견제와 경제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 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선교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에서의 종교활동과 선교활동과 관련 있는 ‘신종교사무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그리고 ‘반간첩법’ 등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이와 같은 조례와 법으로 인해 긴장되어 있는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선교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중국교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

IMB의 부총재 토드 래퍼티(Todd Lafferty) 박사는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동향 포럼’에서 오늘날 세계가 처한 여러 상황을 ‘민족주의의 부상(浮上)’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각국이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국 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팬데믹 초기에는 선교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세계 문화의 평준화에 휩쓸리지 않고 고유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과 영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은 곧

1 이 포럼은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교회협의회 주최로 2023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13회 ‘선후협 선교포럼’이다.

국가이고 국가가 곧 중국공산당이다. 공산당은 헌법보다 더 높은 정치 권위를 갖는다. 여기에 시진핑 1인 체제가 더 강화되었다. 시진핑을 제외하고는 중국공산당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² 시진핑 시대에 제정한 ‘국가안전법’은 전방위(全方位)적으로 모든 분야, 즉 종교 분야도 포함한다. 2018년 2월 1일 반포,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사무조례’도 종교를 법제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국내와 국외,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록교회와 비등록교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시진핑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결국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남침례교단선교회’(IMB)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통계와 각 선교단체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인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추방되었다.

II. 중국교회의 종교·법률적 위치

1. 신종교사무조례

중국공산당 정부는 2018년 2월1일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전의 어떤 조례보다 강력하다.³

토드 래퍼티(Todd Lafferty)는 종교 사무조례와 같은 종교 관련 문건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외국의 교회나 선교사들과 중국 교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진핑은 2012년에 문서 9호를 작성했습니다. 문서 9호는 당원들에게 외부 사상의 '침투'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사상적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며, 일방적인 당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상, 기관, 사람들을 새롭게 경계하며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부에서 기독교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⁴

2.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문건’ (宗教教职人员及外国人宗教活动管理文件)

이 문건은 1994년에 체결된 국무원 법령 144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에서 유래한 것으로, 각각 2000년 2010년에 관련하여 실시 세칙이 두 개가 제정된 바 있으나 특기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비교적 중대하여 원래의 20여 개의 조항에서 40개 조항으로 바뀌었다. 2018년 정부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을 발표했는데, 이 중 새로운 개념은 집단 종교활동의 ‘임시장소(临时地点)’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시에 간행되어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51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종교모임) 단속의 경우, 전에도 개인이 사용하는 종교 서적과 정기 간행물의 수량을 밝힌 적이 있지만, 개정된 조례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비용과 수량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반간첩법’의 시행

중국 정부는 2023년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총 6장(章) 71조(條)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5장 40 조항에서 확대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⁵, 둘째로 법 적용의 범위 확대⁶, 셋째로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⁶, 넷째로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⁷ 등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간첩법’을 우리 교회나 선교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즉,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



〈중국의 한 교회의 모습. 단상 위로 오성홍기가 게양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상화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중국을주께로 2018년 10월호)〉

2 쑨빈, “시진핑 시대의 정치·사회 변화의 중심축 중국공산당 읽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발제안, (2022년 12월 6-7일, 중국선교협의회)

3 김중구, ‘신종교사무조례 연구’, 「with China」 (2018년 겨울호), 56-63.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제 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1982년 ‘제 19호 문건’을 공포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었던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1994년 리펑(李鵬) 총리령으로 공포된 국무원령 ‘제 144조’(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관리 규정)와 국무원령 ‘145조’(종교 활동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은 법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추었다. 이어서 2004년 국무원령 ‘제 426호 문건’인 ‘종교사무조례(宗教事務條例)’를 발표하므로 1994년 총리령으로 공포되었던 ‘제 144조, 제 145조’를 구체화하여 소위 신종교조례(新宗教條例)라 불리는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한 종교사무조례는, 2004년 ‘제426호 문건’이 공포된 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12년 이상 시범지역과 시범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과정을 거치며 연구하고 보강한 것이다.

4 Todd Lafferty, 포럼 자료집 19-20.

5 a.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b. 국가 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6 a.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b. 검사의 권한 명시

7a.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b.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c.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특별히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도 ‘반간첩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한다.

중국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간첩법’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물며 장기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단기여행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교회와 청년들조차도 충분한 준비와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III.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선교사의 상황

중국은 ‘신종교사무조례’,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문건’, ‘반간첩법’ 등을 반포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중국교회, 정부의 공인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삼자교회나 비공인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교회와 신흥도시가정교회 등이 모두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필자는 현장의 소리를 담아 연구의 현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 현지 선교사와 중국인 목회자들⁸과 소통하였고, 서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한국 방문 중인 선교사와도 만나서 중국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1. 중국교회의 상황

중국교회, 특별히 가정교회와 신흥도시가정교회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신종교사무조례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중에도 신앙과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남부지방의 G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임까지도 지속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가정교회가 정부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 시기에 교회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교회 밖에 공간을 마련하여 단속을 피하여 지속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교회 각 부서 별로 보안의 필요가 있는 모임은 모두 외부에 모임 장소를 두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를 위하여 교회는 이전과 같은 형태의 전도가 막히자 각 지역에 자선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만들어 자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남부의 선교사는 지역교회들이 신종교사무조례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상

황이 매우 어려웠음과 교회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도 알려주었다.

새로운 조례의 특징은 한마디로 통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통제가 강화된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역이란 명목으로 이동과 모임의 제한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핸드폰에 백신 증명과 PCR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이동이 감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곧 off-line 모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지교회들은 함께 모였던 큰 공간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이용한 small group으로 모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형 모임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스캔들 같은 공작으로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교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작업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은, 작으면서도 건강한 모임들은 변함없이 모이고 있고, 도리어 리더들의 철저한 관리하에 서로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① small group bible study나 prayer meeting의 활성화 ② cafe church ③ zoom church)

강력한 통제에 의한 대면 모임이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집(會集)하던 형태의 교회는 가정과 사무실로 모임 장소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의 형태(small group)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잘 훈련된 작은 그룹의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남부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 LIU⁹는, 현재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후 삼자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운영은 물론 미성년자의 모임도 연속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종교 교육에 참여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가정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집회와 교육은,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도와 자녀의 부모 역시 언제든지 조사를 위해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신적 준비. 예를 들어 등대교회를 예로 들면 현재 부모들은 여전히 일요일 모임에서 설교에 자녀를 데려오도록 권장하지만, 경고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도들에

8 한국인 선교사는 Lee, Kim1, Han, Jin, Song, Kim2, Kim3과 현지인 리더 Liu, Zhang, Li, Wang등이다.

9 LIU는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경험하였고 한국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는 목회자로,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현재는 선교적 목회를 하면서 주께서 선교지로 보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게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데 참여하고 평소 모이는 장소를 음악 교실처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유형" 교회는 "관심 교실 및 학부모 살롱", "청소년을 위한 음악 모임", "부모-자녀 캠프", "노인 은퇴 학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등 특정 집단으로 나

누어진 집단식 모임이 일부 등장한 바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모임의 제한으로 인해 신자들은 신앙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은 '저녁 식사', '행사', '야외 여행' 등의 주제로 신도들과 구도자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형태로 몇 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LIU는 몇 주 전에 선교사 훈련과 허입을 위하여, MA과정(선교학)을 가르쳤던 필자에게 추천서를 의뢰하여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였다. 비단 LIU뿐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와 리더들의 멈출 수 없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

BG시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리더인 ZHANG과 Q시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대도시의 상황도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 없다고 말한다. 신종교사무조례의 강력한 시행으로 인한 통제와 감시와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압력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은 전통적인 가정교회(house church)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고 한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WANG은 H성의 어느 시에 사는 신흥도시 가정교회 목회자요 그 그룹의 리더이다.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반간첩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어느 경우 이단을 처벌할 때 국가 반란법을 적용하기도 하였었다. 2018년 2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 사무조례의 적용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나 모임은 불법이다. 긴장되는 것은, 혹시라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선교사들의 상황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종교사무조례' 시행 전후로 많은 선교사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중국을 떠났다는 것이다. 간간이 접하는 소식에 의

하면 이 일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이 틀림없다,

B성의 선교사 부부는 최근에 중국 공안에 부부가 각각 두 차례의 조사를 받고, 경고와 함께 두 달 후에 다시 보기로 하여 초긴장 상태이다. 중국 내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던 선교사는 코로나 중에 다른 교회와 합병 요구를 받았으며, 합병 이후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비자가 재개되면서 선교 현지로 들어가려는 선교사들도 다양한 경우를 만나고 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어떤 선교사들은 최근에 중국의 비자가 풀리면서 여행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를 받지 못했다. 또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을 시도했으나 중국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도 여럿 있다.

글을 맺으며

이 글에서는 중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교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중국교회의 종교·법률적 위치에 대하여 '신종교사무조례',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문건', '반간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 선교사의 상황을 현지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문 중에 나오는 LIU와 같은 목회자와 그 지역의 리더들은 여전히 깨어있어 선교사 동원과 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록 현재 상황은 법적인 통제와 정치적 압박과 간섭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국교회의 생명력은 더 강하게, 더 멀리 열방으로 갈 것이다. 🙏

● 이 글은 필자가「한국선교KMQ」2023년 여름호(통권 86호), 85-98.에 게재한 "중국교회 타문화권 선교운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연구", 「with China」(2018년 겨울호), 56-83.
 쉰빈, "시진핑 시대의 정치·사회 변화의 중심축 중국공산당 읽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발제안, (2022년 12월 6-7일, 중국선교협의회)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주최(2023년 3월 27일), 제13회 '선후협 선교포럼' 자료집 웹진<중국을주께로> 2021년 1월호(통권 221호)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임신거주등록증은 중국공안의 인권유린 감시체제

김 정 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1. 활동배경

통일맘연합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인권 프로젝트 11건을 수행했습니다. "내 아이 안고 싶어요."라는 슬로건은 아이들과 강제로 헤어진 북한 어머니들의 깊은 고뇌를 강조합니다. 이 슬로건은 지난 6년 동안 북한인권 프로젝트명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가 대변하는 어머니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표인 저 역시 탈북여성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중국 가족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 아이와 강제로 헤어진 개인적인 경험을 계기로 인권 운동에 10년간 헌신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임신한 저의 딸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강제복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인 남편의 호적에 입양아로 등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내린 이 결정은 결국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후 아이와 재회하려는 시도는 해마다 다양하게 진행했지만 매년 비협조적인 중국 가족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고, 14년 동안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당했습니다.

2018년부터 [내 아이 안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완성해오면서 탈북여성인권과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인 중국 정부의 강제복송문제와 이로 인한 탈북엄마들과 아이들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 연구원들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접근을 통해 강제복송 문제와 탈북여성 피해문제를 분석한 새로운 방식의 인권보고서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들은 2023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유엔에 3건의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여 중국정부의 강제복송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23년 4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북한여성들의 인권문제 중에서 강제복송 정책으로 자녀와 강제로 분리된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최근 2023년 7월에는 유엔 중국 UPR 국가별 정례검토에 맞춰 [중국 내 탈북여성의 강제송환 보고서], [중국 내 탈북여성이 출산

한 중국 자녀 인권보고서] 2건을 통일맘연합회/성통만사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엔 UPR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 반마다 한번)과 평가를 통해 국가들의 실질적인 인권현황 개선을 위한 유엔 시스템입니다.



〈올 5월 3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는 필자(KBS)〉

2. 중국내 탈북여성 인권피해 현황

인권침해실태와 피해사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곤경은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인권유린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박탈과 굶주림, 자국 내 정치적 탄압에 시달린 많은 북한 여성들이 위험한 중국항을 택했지만, 착취의 그물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2020년 강제복송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국내 탈북여성 221명, 그리고 국내 탈북여성과 혼인중인 중국인 남편 300명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유린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참가자의 상당수(약 90%)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어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거나 강제로 납치되어 중국 남성들에게 신부로 팔려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인신매매 결혼은 어느 정도의 안전과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많은 북한 여성들은 심각한 학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을 겪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여성의 78.7%가 중국에서 자녀를 낳았으며, 평균 1.3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며, 언제고 자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거주지에 대한 빈번한 급습으로 이어져 여성들이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강제 송환은 임신부, 중국 아이들의 어머니, 인신매매 피해자 등 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21명 여성 중 13명(5.9%)은 강제복송 후 재탈북경험이 있었습니다. 복송 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사례를 고려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명(5.0%)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으나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으며, 37명(16.7%)은 중국 공안을 피해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여성 중 절반(51.1%)만이 중국에서 외출의 자유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송환 정책으로 인해 외출의 자유가 박탈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 남편 300명을 대상으

로 중국 내 복송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37%가 탈북 여성과 결혼한 후 강제복송 정책 때문에 가족이 도망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송환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구타를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5명, 강간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여성은 4명, 구타나 강간을 들었다는 응답은 34명이었습니다. 또한 임신한 탈북여성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낙태되는 것을 목격한 사례는 4건, 강제 낙태로 태어난 아기를 의사시킨 사례는 2건이었으며, 22.7%의 여성이 강제로 낙태된 태아의 의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후 북한 보위부에게 구타를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6명, 강간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3명이었습니다. 강제 낙태 직후 아기가 익사하는 것을 목격한 여성은 3명이었으며, 72명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제복송을 경험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복송된 후 임신부 강제 낙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복송된 탈북 여성중 임신한 여성은 어딘가로 사라지며, 중국인 남성과 임신한 여성은 아이의 아버지가 한족인 경우 무조건 낙태를 하게 됩니다. 한 증언자는 중국 한족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임신 4개월 때 아기를 강제로 낙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낙태 후 노동단련대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동원되었는데 일하던 중 낙태로 인한 심한 출혈로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노동 단련대에서 주는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3~5개나 빠지기까지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15명 중 중국에서 두 차례 인신매매로 팔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으로, 팔려간 곳마다 아이를 낳아주어야 했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 이상 인신매매를 통해 팔려간 세 명의 증언자는 처음 팔려간 중국인 집에서 폭력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합니다. 15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10명은 인신매매로 팔려간 중국인 남성과 10살 차이가 났고, 2명은 20살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4명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중국 남성들의 직업은 주로 농부였고, 나머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정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인신매매를 경험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편의 75%가 중국 인신매매 시장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모든 인신매매 결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부에게 돈을 주고 결혼하는 경우 부당 노동, 가정폭력, 성폭력, 감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탈북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인 남편, 가족, 궁극적으로는 중국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인 남편과 가족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편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제송환 정책 때

문에 공안에 의해 남편과 가족이 구타를 당한 사례는 11건(3.7%)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11.7%는 탈북 여성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중국인 남편의 27.7%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구타/성희롱/강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제복송 트라우마

복송위험 및 두려움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며(67%), 그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64.7%). 북한으로 잡혀갈까봐 두려움이 시달린다고 답한 143명에게서는 사람을 피하는 버릇(35.7%),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생각(22.4%), 쫓기는 악몽을 자주 꾸는(21.0%) 등의 증상이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밤에 대한 두려움(19.6%), 영문도 모르게 자꾸 우는 버릇(10.5%),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악몽(10.5%)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여성 중 34.8%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자살 생각을 한 77명 중 13명은 죽으려고 항상 약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7명은 실제 자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를 중국인 남편이나 가족이 알아차리거나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복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아내의 자살 생각에 대하여 중국인 남편들에게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12.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탈북 여성이 느끼는 복송 위협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해 이어지는 자살 생각에 대해 남편이 온전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중국지역별 임시거주등록증 발급

2020년 중국내 탈북여성 221명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중국 공안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에게 신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임시거주등록증'으로, 국가가 발급한 정식적인 신분증이 아닌 해당 공안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중국 공안 당국이 비송환을 약속하고 그들이 중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머물러야 한다면 임시거주등록을 유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내 탈북여성들은 먼저 중국 공안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등록증은 종이에 각 등록 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등록 번호는 분명히 중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본인 사진과 함께 거주지, 중국인 남편과 자녀들의 이름, 본인과 남편의 전화번호가 적힌 확인서 형식입니다. 임시거주등록증은 지역에 따라 불이행 시 벌금이 5,000~8,000위안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임시거주등록증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항공 및 기차 여행은 물론 자비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탈북민 임시거주등록과 관련한 중국 공안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한족이 모여 사는 중국의 한 지역 촌장의 제기로 B성 공안에서 먼저 탈북민 임시거주등록증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100명 정도의 탈북여성들이 있는데, 공안이 이들을 잡아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중국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항의는 특히 한족만 모여 사는 지역들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의 종족번식이 멈출 정도로 심각하다”고 중국 지역성 공안에 항의를 했으며, 이런 민원이 받아들여져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며, 이 사실을 모르는 공안들이 많습니다.

중국 공안은 임시거주등록을 한 탈북민들의 휴대폰을 한 달에 2~3번 직접 조사합니다. 해당 인터뷰 대상자 7명 모두 직접 조사를 받았거나 주변 탈북민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조사는 대체로 한국과의 전화 통화나 문자 여부가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에 중국의 6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여성의 임시거주등록은 자발적 순응, 강요, 협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길림성에 임시거주등록을 했던 일부 북한여성들이 중국의 강제복송정책에 따라 현재 구금되어 국경변방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거주등록을 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중국당국의 강제복송 금지 약속에 내재된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이 약속이 탈북 여성들이 겪어온 기존의 인권침해에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경에 탈북여성 2천명 구류했다는 기사와 보도들은 임시거주등록을 진행한 탈북여성들도 이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중국내 탈북여성 강제송환에 관한 중국의 국가정책

탈북민 강제복송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20년이 넘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일련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탈북민을 망명을 청구하는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분류하는 국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관점을 계속 유지했

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임을 주장하며,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난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2018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3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서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도 아니고 고문 피해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청문회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정책은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에 따라 탈북민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 또는 불법 이민자라는 국가 대외 전략을 더욱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요약분석하면 중국 정부의 주요 전략이 드러납니다. 첫째, 중국은 난민협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중국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크게 부족하여, 이로 인해 특정 대응 조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내법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접근 방식이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주권과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법률과 사법 판결에 근거하여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그들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북한 여성과 자녀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5. 중국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복송 중단

이번 중국의 임시거주등록증 발급은 중국 내 한족의 반발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곧 강제복송정책이 중국 자국민에게도 얼마나 큰 인권유린 정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복송정책은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외교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탈북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중국인 자국민까지 끔찍한 피해를 주는 인권유린정책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여 살아가는 탈북여성만이라도 복송정책을 먼저 금지하여야 합니다.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엄마들만이라도 먼저 복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중국정부의 강제복송 대상자에서 중국인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이 제외된다면 북한 내 인권유린 피해자 또한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송되는 탈북민 중 대다수는 중국인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성애로 인하여 재탈북을 시도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들의 재탈북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인권의 우회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강제복송 감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남편의 가족 또한 지속적으로 탈북여성의 복송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복송정책은 중국 내 자국민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남편은 아내의 복송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엄마와 자녀의 이별 상황으로 인하여 세대를 넘는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인 남편과 자녀, 그리고 그 외 모든 가족까지 피해를 유발하는 중국 내 강제복송정책은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한 연구 내용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관련 보고서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내 인권유린 문제가 주목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6. 맺는 말

지금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인권 피해 상황은 국내 탈북여성들에게는 과거이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자녀와 이별 중인 국내 탈북엄마들은 강제복송 정책이 악몽으로 표출되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엄마들은 여성이기 전에 엄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이별한 탈북엄마들의 사례는 탈북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자녀와 이별한 사례, 여러 차례의 인신매매로 인해 중국 내에서 자녀와 이별한 사례, 그 외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별한 자녀들이 있는 지역도 북한과 중국으로서 경우에 따라 자녀의 국적도 다릅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탈북여성들 중 북한과 중국에 이별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한국가정의 환경에 따라 자녀와의 이별에 대한 아픔

을 혼자 감당하며 강제복송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도 국내에는 자녀와 이별한 수많은 탈북 엄마들이 있지만 한국 가정과 자녀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여성들의 호소는 오로지 엄마와 아이만을 봐달라는 것뿐이고 그것이 지난 6년간 통일맘연합회가 만난 수많은 탈북여성들의 호소였습니다. 그들은 법과 정치, 외교는 관심 없고 오직 아이에게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엄마들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인권보다 중요한 법이 무엇이며, 엄마와 아이의 권리보다 중요한 정치 외교가 무엇 일까요? 그런 법과 정치, 외교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당연한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이마저도 자신의 죄라고, 자신의 업보라고 누구보다 자신을 탓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법과 정치, 외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탈북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문제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떻게 해결 받아야 하나요?

2016년 통일맘연합회 <내 아이 안고 싶어요> 첫 국회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유보다 오직 엄마와 아이만을 봐주세요.”

통일맘연합회는 우리의 운명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운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운명을 억척같이 이끌고 가기 위하여, 탈북엄마들과 아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길에 앞으로도 당당하게 앞장설 것입니다. 소수의 후원자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강한 모성애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맘연합회 탈북엄마들에게 격려와 응원, 따뜻한 위로와 실천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혼자서 이겨내고 있는 탈북엄마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맘연합회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탈북과정에서 북한 출신 여성이 자녀와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15년 설립되었고 2016년 통일부에 등록되었습니다. 통일맘연합회의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ongilmom.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의 선교전략: 외교적 관점에서

최재덕 (원광대 교수,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된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을 단절시키고 대서양동맹 및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강화했으며 나토가 유로·태평양 안보 개념을 채택하여 전략 범위를 태평양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이 민주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제·에너지·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이 급진전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등의 변화를 추동했고, 진영 경쟁으로 확장된 미중 경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냉전적 안보 구도를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메리카대륙의 패권국으로서 다른 대륙에서의 지역 패권국 출현을 극도로 경계해왔던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은, 대륙의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하였고,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은 미중패권경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대유라시아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브레진스키가 예견한 중국·러시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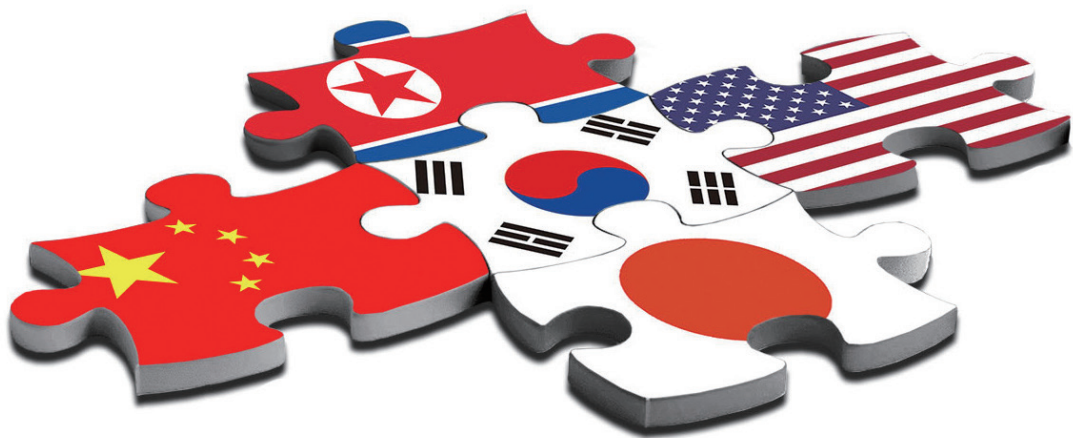
란의 반패권 동맹은 이란이 2022년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현실화됐다. 중국은 2022년 SCO 정상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친러 국가 벨라루스와의 외교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SCO 개발은행 설립과 회원국 간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을 제안하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2022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확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기존 회원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 국가를 더 초대해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했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냉전으로 이행하는 국제 정세의 혼란기를 자국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 삼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패권정책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노동신문에 대서특필하며 조종 친선을 강조하는 등 북중·북러 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공급망을 형성하며 번영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공산당 주도의 경제체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이념과 경제 안보의 통합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전략으로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력의 상대적 약화를 인지한 미국은 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를 본격화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과 중국의 대만통일 의지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의 안보적 대립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커지고 있다.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대만에 전례없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거듭 승인하며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다. 대만은 미국의 무기 지원 및 자체 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향상시키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통일이 역사적 과업이



며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무력통일 리허설’이라 불릴만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3년 4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도 양안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활 이익이듯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대만해협의 긴장은 완화와 고조를 반복하면서 차츰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마·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 한반도의 냉전적 구도 형성은 미중패권경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주한 미군의 참전, 1961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북한의 참전, 한미일 안보 공조에 따른 한국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듯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이 연루되거나 한반도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냉전이라는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헤쳐나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가치외교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5년 만에 한미안보훈련을 재개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외교의 지경을 확대했으며, IPEF와 칩4 동맹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중·일·러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우크라


이나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다. 미·러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유럽의 안보협력체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해협에서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완충지 확보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통치를 결정했고, 소련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을 도왔으며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북한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응하면서 북중의 혈맹관계가 형성됐다. 1953년 북한, 중국, 유엔군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중이다.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중간국의 외교적 실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어려운 안보적 상황에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한국은 안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경쟁력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쟁이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 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대만의 생명줄이다. 대만 정부는 정부 주도로 1974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세워 1987년 TSMC가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북부, 서부, 남부에 첨단과학 기지 13곳을 반도체 벨트로 건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지경학적 가치를 높였다. 한국도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IPEF와 CHIP4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의 기저에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깔려있다. 냉전 시기에도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고,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도 인도와 같이 중립을 지키거나 터키·이스라엘과 같이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전 세계가 정확히 양분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립도 정확히 양쪽 극단에서의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많은 국가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한 편으로 치우치긴 하되 양극단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한쪽 편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좌표 설정도 이념, 경제, 안보적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가변적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경계가 명확했던 냉전시기와 달리 신냉전기는 그 경계가 흐릿하며 국익에 따라 좌표의 설정과 변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냉전시기와 같이 한 편에 가담한다고 해서 강대국에 안보적 책임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기에 외교적 좌표 설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신냉전기에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중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편을 동조하여 다른 한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스스로 강해지기(自強)를 선택하고, 선교에 있어서는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섬세하고 명민한 선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 수기

이꼬심

8화 - 2차 탈북

김서윤 전도사

2002년 12월, 복송 된지 약 6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결심을 했다. 처음 복송이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중국에 갈 수 있게 되더라도 신분이 없는 상태로 다시 나라 없는 서러움과 온갖 수모를 겪게 될 바에는 내 고향인 이곳, 북한에서 살아보자고 마음도 먹어봤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장마당에서 마주한 수많은 꽃제비들이었다. 우리가 탈북하기 전에도 꽃제비는 있었지만, 2002년 장마당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병들고 뼈밖에 없는 노숙자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다시 중국에 간다 해도 방 한 칸도, 땃땃한 신분도 하나 없고 누구하나 우리를 반겨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국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기다리고 있을 옥이 이모가 떠올랐다. 그러니 더욱 중국에 가서 이모를 만나 죽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상태는 최악이었다. 감옥에서 생긴 봉와직염¹으로 우리 세모녀의 발목은 고름이 흐르고 통통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수개월을 굶으면서 제대로 된 음식하나 먹지 못해 소화기관도 다 망가졌다. 우리는 오직 정신력 하나로 움직였다.

깍다리 이모는 나와 동생을 보며 너희들은 꼭 살아야 한다며 어머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다. 그렇게 모든 일은 순적하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깍다리 이모의 도움으로 다시 중국으로 향할 수 있었다. 99년에 처음 도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막하여 생고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도문(투먼)으로 가기로 하고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향했다.

그렇게 온성에 도착했지만 두만강을 건너가기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그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얼지 않은 두만강이 문제였다. 강물이 얼어야 우리가 그 위로 건너갈 수 있는데 강기슭만 얼어있고 중간은 얼지 않은 상태였다. 왜 물이 얼지 않나 봤더니 강 상류에 있는 펄프공장에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

¹ 피부를 통해 유입되는 세균이 피부가 가려워서 긁거나 짓물려 상처 나는 경우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균이 침입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질병.

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자니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너무 위험했다. 그렇다고 언제 열지 모르는 강물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열지 않은 강을 헤엄쳐서라도 건너기로 결심했다. 조금 더 지체한다면 분명 국경수비대들에게 들킬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잡혀가서 처음부터 그 힘겨운 과정을 견뎌낼 자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건강 상태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그 동안 여러 구금시설을 이동하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려 오시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 몸무게는 30킬로를 겨우 넘기는 정도로 뼈째 마르셨고 피부도 까맣게 타 형편없는 물골이셨다. 그런 상태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니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셨다.

몸과 마음이 나약해지신 어머니를 몰아붙인 것은 나였다. “잡혀도 중국 가서 잡히는 게 낫지 않겠어?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잖아.” 라며 엄마를 설득했다. 그렇게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물은 처음에는 무릎까지 오던 것이 갑자기 가슴까지 훑 올라왔다. 추운 겨울에 흐르는 강물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가워서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온 몸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 와중에 강물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들이 우리 몸을 툭툭 치며 지나갔는데 너무 쓰리고 아팠다. 결국 강 중간쯤 와서 어머니는 그 고통을 버티지 못하시고 다시 북한쪽으로 황급히 돌아나가셨다. 추위에 덜덜덜 떠시는 어머니의 이빨이 드드드드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안타깝다고 생각할 세도 없이 너무 크게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도강 시도가 들킬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우리 포기하자.” 라는 어머니의 말에 그럴 수 없다며 동생과 엄마를 끌고 다시 강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고비가 되었던 강의 중턱을 넘으니 강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저 멀리 눈발이 보이고 반짝이는 집들이 보였다. 다시 중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물에서 나오자마자 우리의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몸도 얼어있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옷을 말리고 어찌고 할 틈도 없이 우리는 무작정 논으로 뛰어 들어가 마을을 향해 달렸다. 그때는 국경 연선에 철조망이 없던 때라 앞으로 무작정 달리면 마을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마을 앞에 도착했다. 마을로 들어갈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한 집을 골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有人在吗 (계세요)?” 처음 탈북했을 때와는 달리 동생과 나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기에 일부러 중국 사람인 척 중국말을 썼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조선말이었다. “아니, 이 밤에 누구지?” 우리는 다시 중국어로 대답했다. “能借一下电话吗 (전화기를 한번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분은 조선족 할머니였다. “어떡하나... 중국말을 못하는데

내가...” 할머니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조선족이셨던 것이다.

우리는 조선말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빌릴 수 있는지 다시 여쭙었다. 조선말을 하는 우리가 신기했는지 놀라신 할머니가 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에 “전화? 저기에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할머니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전화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바로 옥이 이모

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울먹이며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엄마 옆에 동생과 나는 딱 달라붙어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병 찌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조카들이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죽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언니~” 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그제야 수화기 너머의 이모도 놀라며 진짜 서운이네구나 하셨다. 옥이 이모는 바로 기차를 타고 도문으로 갈 테니 모레 역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지금이야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속철도가 없었고 그 구간에 직행 열차도 없었기에 최소 이틀은 기차를 갈아타며 이동해야 하는 여정이었다. 전화를 끊고 우리는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매우 난처해하셨다. 당시 북송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공간의 단속도 심하던 시기였다. 중국인이려면 북한사람을 보면 무조건 공간에 신고를 해야 했고, 돕다가 걸리면 처벌도 받았다. 우리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중국말을 아주 잘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틀만 숨겨주시면 얼마간의 돈도 드리겠다고 했다. 고심 끝에 할머니는 알겠다고 승낙해주셨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수색하러 들어오거든 마루 밑에 숨으라고 당부를 하셨다. 할머니는 노총각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나중에 귀가해서 우리를 보게 된 그 노총각 아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할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우리를 내쫓거나 신고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조선족 할머니의 집에서 조용히 틀어박혀 있는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이틀이 지났다. 우리는 옥이 이모를 만나러 그 노총각 삼촌과 함께 도문역으로 향했다. 옥이 이모가 아침 일찍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전날 밤에 택시를 빌려 출발했다. 우리가 있던 곳은 시골이었기에 도문 시내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달리는 동안 택시에서 자면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고 있던 내 얼굴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졌다.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 바깥에 키가 훗칠한 변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서있었다. 시끌시끌 소리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변방대원이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했다. 생각도 못했던 검문에 심장이 쿵쿵쿵 뛰다 못해 튀어나올 지경이었



〈도문시 동쪽 두만강 강변공원에서 촬영한 북한 온성군 남양로동자구의 모습(사진=마이리얼트립)〉

다. 택시기사와 삼촌은 당연히 괜찮았다. 우리는 출발 전에 삼촌과 같은 일행이 아니라 중간에 합승한 걸로 하자고 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다. 나와 동생은 아직 어리니 변방대원은 어머니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너무 놀라신 어머니는 놀라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중국어로 이런 말이 튀어 나왔다. “아니 요즘 누가 택시 타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요.” 그 말을 들은 변방대원들이 “하긴, 이 밤에 누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라면서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인데 너무 급해서 신분증을 안가지고 나왔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아파보였다. 점점 설득이 되는 것 같이 보였다. 마침 무서워서 꼭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데 자꾸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엉엉 울며 말하자 군인들이 당황하며 빨리 보내주라고 서로 얘기했다. 긴가민가하며 그래도 신분증은 봐야하지 않나하는 군인을 다른 군인이 “아프다잖아” 라며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다. 게다가 우리가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니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도 한 몫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다행스럽게 검문소를 지나칠 수 있었다. 이제는 차에서 다음 검문소가 나오면 어떻게 말을 할지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자며 엄마는 중국어로 “죽겠다”라고만 반복하고 동생은 울고 나는 우리 엄마가 죽으면 아저씨들이 책임질 거냐고 따지는 역할을 맡았다. 기차역까지 8개 정도 검문을 지나갔던 것 같다. 변방대원 입장에서도 트렁크를 열어도 텅텅 비었고 가지고 있는 짐도 없으니 딱히 의심할만한 거리가 없기도 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검문소는 상당히 위험했다. 변방대원들이 강경하게 우리 모두를 차에서 내리라고, 병원에 가더라도 일단 내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화를 마구 내며 지금 죽을 거 같은데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니 이기지 못하고 보내주었다. 어찌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하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내 우리는 도문 시내로 들어와 도문 역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먼저 역으로 들어가겠다며 이모가 오면 부를 테니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자그마한 몸을 이끌고 당당하게 역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데 역 안에 공간들이 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공간이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무슨 생각이신지 당당하게 부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을 본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왔건만 이렇게 잡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역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역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무언가가 잘못 났다는 것을 깨

달은 어머니는 자신의 앞사람이 들어갈 때 꼬리를 물고 미꾸라지처럼 쪼르르 안으로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공간이 어머니를 놓친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 순간 엄마가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우리는 하늘이 도왔다며 감격했다. 어머니는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역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아닌 뒷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엄마와 다시 만났고, 그렇게 가슴 졸여 역에 들어 간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옥이 이모를 만날 수 있었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은 우리는 이모에게 부탁하여 우리를 도와준 삼촌에게 처음 할머니 집에서 약속했던 돈을 쥐어 보내고 이모가 사준 기차표를 받아 기차를 타고 다시 길림으로 향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시 우리는 임기응변과 운으로 그 땅을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불러내신 것이리라...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일들을 되짚어 생각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섭리하심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중국 도문역 (사진=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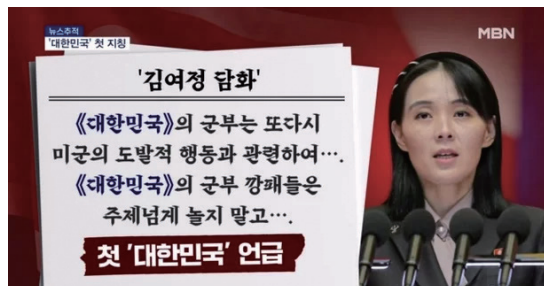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99명… “향후 입국 추이 지켜봐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의 수는 99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은 모두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내,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입국 추이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탈북자 구출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올해 상반기 제3국을 통한 한국 입국 경로가 일시적으로 원활해진 경향이 있었지만, 여전히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은 어렵고 탈북 비용 또한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7월 18일) 

김여정, ‘남조선’ ‘남측’ 아닌 “대한민국”이라 한 이유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 비난 담화를 내놓으면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측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은 용도인 ‘겹화살팔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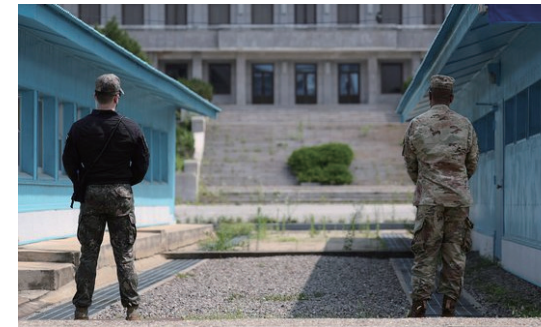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

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은 그간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북한의 정책이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했고, 당 비서국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도 사라졌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거부를 대남 기구 조평통이 아닌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국 군인 1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한 병사는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이등병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NYT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테일러 대령은 해당 병사가 “고의로, 그리고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7월 12일과 1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에는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

성-18형'을 발사하였고, 19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19일 미사일 발사는 18일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북한은 지난 7월 1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체제 강화와 군사동맹 체제 확장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반발했다. 

1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특별히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은 북한 선교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교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역이 불가능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사회통제, 종교통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선교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이 간첩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중국의 선교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난관들이 북한 선교 현장을 더욱 성결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게 하는 축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종교사무조례'와 온라인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뿐 아니라, 종교활동장소의 허가과 등록을 규제하는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을 시행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 규제 강화와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 교회의 북한 선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북한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에서 지하교회 예배 모임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소수의 사람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심어놓은 보위부 정보원에 의해 예배 모임이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종교서적,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유입과 배포의 경우 최소 무기노동교화형에서 사형이라는 매우 극심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 교양 교육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시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희생당하는 북녘의 성도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금시설이 확장되었고, 최대 2천여 명의 탈북자가 수감되어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관련 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면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재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신원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복송될 수 있어 탈북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내 탈북자들 중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 복송되어 이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하루 속히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되는 해외 북한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렀던 북한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특별히 선교사나 현지 기독교인과의 접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7월 들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한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에 쓰지 않던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등, 남과 북을 두 개의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북한의 정책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국의 지도자들의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인 통일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인해 년 초부터 아사자 발생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5월 6일 서해를 통해 탈북한 일가족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산간 오지에 추방당하였거나 나쁜 배경성분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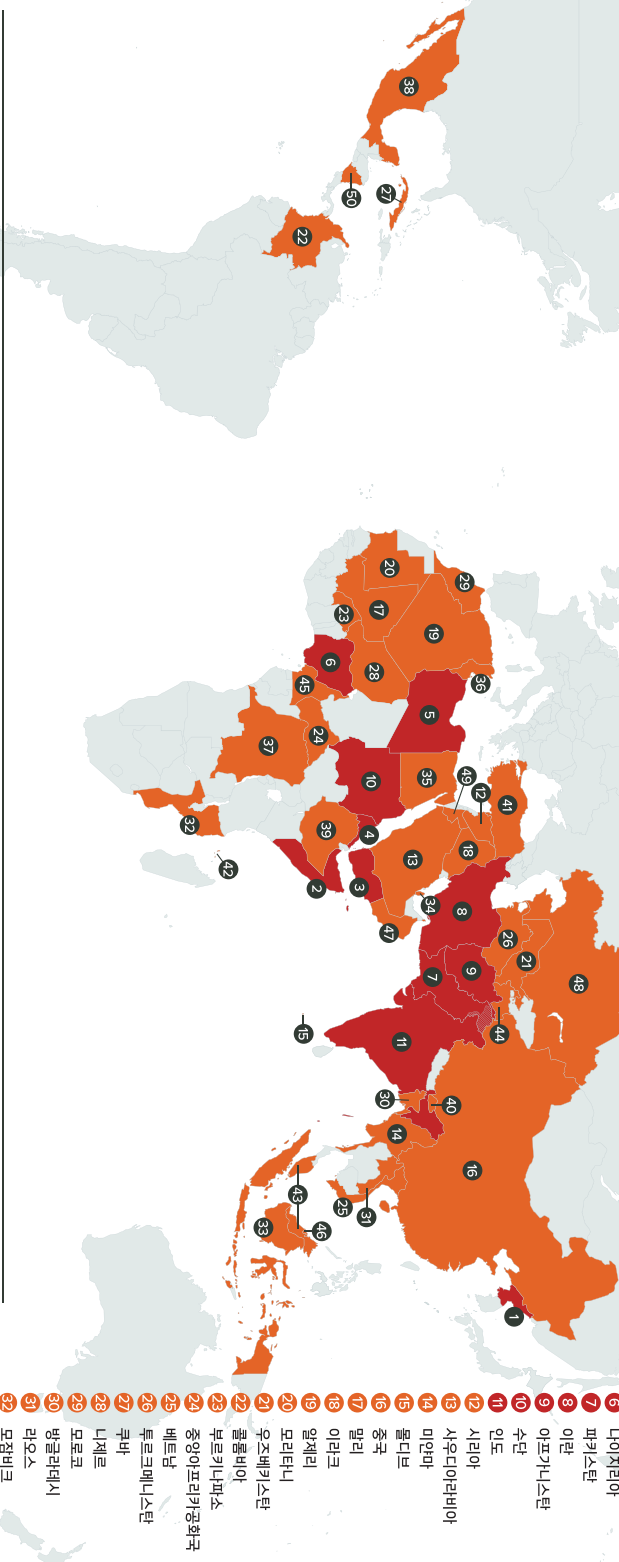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7월 28일

WORLD WATCH LIST 2023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지도



ABOUT THE LIST

월드와치리스트에 관하여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제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인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